

IV. 결론

1. 문화적 갈등과 통합의 양상
2. 통합을 지향하는 대응의 유형
3. 해외통합 사례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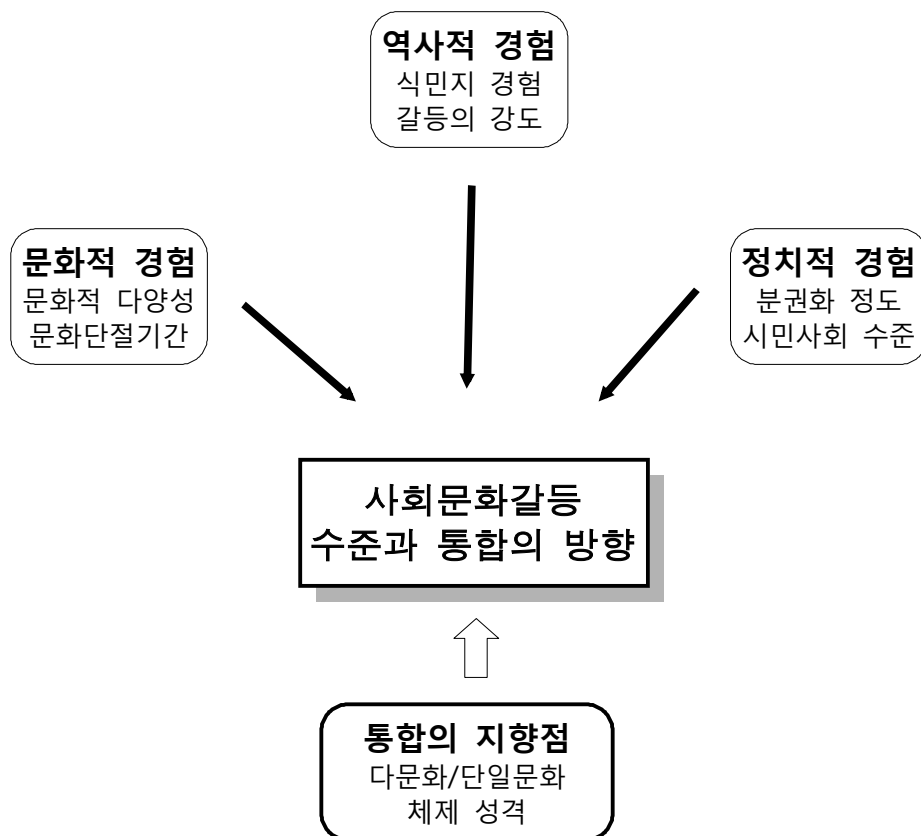
IV. 결론

1. 사회문화적 갈등과 통합의 양상

1) 사회문화적 갈등 및 통합의 배경

사회문화적 갈등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해당 체제의 역사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갈등을 초래한 원인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해당 체제나 국가가 갖고 있는 역사적 조건은 사회문화갈등의 양상과 향후 통합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역사 문화적 조건들을 다시 세분화해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차원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다음의 그림 참조).

<그림 IV-1> 사회문화 갈등과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째, 역사적 경험이다. 사회문화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경험은 다시 두 가지 요인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식민지(혹은 피지배)의 경험이다. 식민지 경험은 기본적으로 외부문화의 유입을 동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서로 다른 문화들이 접촉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문화적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이 경우에는 특히 지배와 피지배라는 권력 관계와 결합됨에 따라 문화적 갈등도 극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사회적 갈등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문화를 담지하고 있는 집단 간에 들어서 전쟁을 겪었거나 이에 버금가는 테러 등의 인명살상의 경험이 있는가 여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전쟁 등의 정치사회적 갈등의 경험은 상호 적대감을 강하게 할 뿐 아니라 트라우마를 형성하여 통합과정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대상 국가들을 이 기준에 맞추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베트남과 한국은 식민지 경험도 있었고, 전쟁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갈등의 차원이 중층적이지만 이 가운데 아랍인들과의 갈등 경험은 식민지에 준하는 지배·피지배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독일은 식민지 경험이라고 할 수 없지만, 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에서 실질적인 지배를 일정 부분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통일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식민지 경험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홍콩도 비록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하였지만 장기간에 걸쳐 영국의 식민지였고,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중국정부의 관할 하에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 경험 사례에 들 수 있고, 이스라엘의 러시아 이민이나 에티오피아 이민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표 IV-1> 역사적 경험과 사회문화갈등 및 통합

구분		식민지 경험(피지배)	
		유	무
정치사회적 갈등	강	이스라엘(아랍), 베트남, 남북한	.
	약	독일, 홍콩, 이스라엘(러시아, 에티오피아)	캐나다, 미국

둘째, 문화적 경험이다. 문화적 경험은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단일문화와 다문화 경험여부라고 할 수 있다. 체제의 분리이전 그리고 통합이전에 단일문화를 지향했는가 혹은 다문화를 유지하여 왔는가는 문화적 갈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단일 문화적 전통이 강했다면 문화적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과정에서 단일 문화를 지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통합과

정에서 단일문화의 성격에 대한 합의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문화적 경험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문화적 단절의 기간과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기간과 정도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가 축적적이며 단기간에 변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히 단절기간이 길수록 문화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간을 범주화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문화는 세대를 통하여 전수된다는 차원에서 한세대 이전을 단기 그리고 생애 주기 상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세 세대 이후를 장기로 구별하여 보았다.

문화적 경험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국가들을 분류해 본 것이 다음의 표이다. 단일문화 전통이 강하면서 문화적 단절이 단기였던 경우가 독일이라고 한다면 중기의 경우가 한국과 이스라엘의 러시아 이민이 될 것이고, 장기의 범주에 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에티오피아 유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다문화 경험이었으면서 단절의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경우가 베트남이라고 할 수 있고, 다문화적인 지향성이 있었던 중국에서 홍콩의 경우는 비교적 단절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중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아랍인의 경우는 이스라엘 건국이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도 다문화주의적인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차원의 다문화 경험에 위치 지웠다.¹⁾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백인중심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형성 자체가 이민에서 비롯되었고, 외형적으로 다문화주의를 명백하게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전통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럽 출신 특히 영어권 출신을 제외하고는 문화단절의 기간이 세대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문화단절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V-2> 문화적 경험과 사회문화갈등 및 통합

구분		문화적 다양성	
		단일문화	다문화 경험
문화 단절 기간	단기	독일	베트남
	중기	이스라엘(러시아), 남북한	홍콩
	장기	이스라엘(에티오피아)	캐나다, 미국, 이스라엘(아랍)

셋째, 정치적 경험이다. 정치적 경험은 사회문화적 갈등보다는 통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분권화의 정도

1)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치적 억압과는 별도로 아랍문자를 포함하여 이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있다.

와 시민사회의 경험이다. 정치적인 분권화의 경험이 있고, 분권화의 범위가 넓다면 사회통합 정책의 주체는 지방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중앙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의 유무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시민사회가 강하거나 혹은 현재 상황이 권위주의 국가체제라고 하더라도 시민사회의 경험이 있다면, 문화 주체는 국가보다는 시민사회일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문화적 자율성도 높을 것이고 문화정책은 국가보다는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클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국가를 정치적 경험에 따라 분류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분권화의 정도가 약하지만 일정한 수준의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독일은 시민사회가 성장되어 있는 동시에 분권화 수준도 광범위하다. 중국과 베트남은 봉건적인 전근대 국가에서 식민지 침략을 경험하고 해방 이후 사회주의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근대적 시민사회의 경험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분권화의 경우 베트남은 오랜 동안 분권화된 국가체제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권력이 당과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던 중국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3> 정치적 경험과 사회문화갈등 및 통합

구분		분권화 정도	
		약함	강함
시민사회 경험	유	이스라엘, 남북한	캐나다, 미국, 독일
	무	중국	베트남

넷째, 통합이 지향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합의 지향점은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 데 문화적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단일문화를 지향하는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표 IV-4> 통합의 지향점과 사회문화갈등 및 통합

구분	다문화	단일문화
동화주의 성향	미국, 이스라엘	남북한
다양성 추구	캐나다, 중국(홍콩)	베트남, 독일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다문화를 천명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공식적으로 다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다문화를 인정하는 것은 다소 구별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은 소수민족 문화를 보호하면서 다언어도 인정하고 있고, 캐나다는 프랑스 언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샬러드’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동화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아랍인들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다문화주의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분리주의로서 통합자체를 지향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다문화를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앵글로 색슨의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지역적 다양성 문화적 다기성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일 이후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지향하여왔다는 점에서 단일문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문화를 인정하는 토대에서 독일문화로의 통합을 실질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남북한은 체제 통합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향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민족문화의 복원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문화를 지향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회문화갈등의 원인과 양상

사회문화갈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통합을 지향한다면 단일한 체제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문화접촉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화 갈등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체제가 통합과정에 있느냐 통합을 이루었다면 단일 국가 상태인지 연합국가의 수준인지가 의미가 있게 된다. 이를 정리한 것인 다음의 표이다.²⁾

<표 IV-5> 사회문화갈등의 원인과 체제통합

구분		통합의 수준		
		과정	연합	단일
원인	민족·인종			이스라엘(아랍)
	이주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러시아·에티오피아)
	분단(이데올로기)	남북한	중국(홍콩)	독일, 베트남

사회문화갈등의 원인으로는 민족·인종적 차이가 중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 국가 가운데는 아랍문화와 충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국가간 사회문화갈등 뿐 아니라 하나의 국가내의 갈등의 경우는 민족과 인종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경우가 많다.³⁾ 사회문화적 갈등의 요인이 이주에서 비롯

2) 이우영 외,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유형에 대한 기초연구」 (2011 문화부) 참조.

3) 북아일랜드나 남아프리카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통합유럽을 지향하는 현재 유럽연합내의

된 경우는 이스라엘의 러시아·에티오피아 이민과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스라엘의 러시아·에티오피아 이민들이 입국한 시점에서 한세대가 되지 못하였지만 현재는 단일 국가체제에서 살고 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도 단일국가이지만 연방주의와 분리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합국가의 통합수준으로 분류하였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독일 및 베트남은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국가 분단으로 사회문화갈등이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은 일국양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과 베트남은 단일국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는 여전히 분단 상태에서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사회문화갈등의 수준과 양상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진행되고 있는 현상 자체는 다음의 몇 가지 기준으로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문화 갈등의 강도이다. 사회문화갈등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갈등하는 문화 간의 차이와 다른 문화가 접촉하는 상황이다. 문화적 차이가 크고 접촉의 상황이 전쟁이거나 식민지적 지배와 같이 적대적인 경우 문화갈등의 강도도 높아진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아랍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갈등의 정도가 증폭되는데 베트남이나 남북한이 이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갈등이 제도화되거나 문화주체간의 관계가 비적대적이면 문화갈등은 관리될 수 있다. 캐나다와 미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스라엘의 러시아 및 에티오피아 유민들은 유대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중화문화권에 있는 홍콩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국가는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지만 문화적 차이가 적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주체간의 관계도 비적대적이라는 점에서 문화 갈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문화적 갈등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표 IV-6> 사회문화갈등의 강도

문화 차이 정도 문화 접촉 상황	차이가 많음	차이가 적음
적 대 적 상황	㉡ 이스라엘(아랍인)	㉣ 베트남, 남북한
비적대적 상황	㉢ 캐나다, 미국	㉤ 이스라엘(러시아·에티오피아), 중국(홍콩)

- ㉡ 사회문화갈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
 ㉣ 사회문화갈등이 실제보다 증폭되어 나타남
 ㉢ 사회문화갈등이 제도화되어 문화변동으로 이어짐
 ㉤ 사회문화갈등이 상대적으로 약화됨

사회문화갈등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다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사회문화 갈등의 국면이 단일적인가 여부를 의미한다. 전체주의국가라고 하더라도 문화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일정 수준의 하위문화가 존재하기 마련이기에 사회문화적 갈등은 기본적으로 중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사회문화갈등이 다층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들의 경우 비교적 단일적 사회문화갈등을 겪는 경우는 독일과 남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한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분단에서 사회문화 갈등이 비롯되었기에 주로 이념 차이가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의 경우도 비교적 사회문화갈등의 국면이 단순하다.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는 사회문화갈등이 국면이 대단히 중층적이다. 아랍인들과는 인종적 종교적 갈등을 겪고 있다면 러시아 이민들과는 이념 기반의 사회문화갈등을 에티오피아 이민들과는 산업화 수준차이에서 비롯된 사회문화갈등을 겪고 있다. 베트남은 분단 국가였다는 사실에서 이념적 갈등이 주된 국면인 것 같으나 분단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남북의 인종·문화적 차이 등으로 다층적인 사회문화갈등이 존재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이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사회문화적 갈등을 하나로 묶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IV-7> 사회문화갈등의 다층성

구분	국가
단층적 사회문화갈등	독일, 남북한
다층적 사회문화갈등	이스라엘, 중국(홍콩), 캐나다, 미국

사회문화갈등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세 번째 초점은 갈등 양상의 변화 경향이다. 사회문화적 갈등이 생겨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에 조건에 따라 어떤 경우는 갈등이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한다. 독일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의 지체되면서 사회문화적 갈등이 일정기간 존속하였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통합이 진전되면서 갈등을 약화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이 점차 확산되면서 사회문화적 갈등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통합과 터키인 등 외국인 증가는 다른 차원의 사회문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베트남은 통일초기의 사회문화적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고, 도이모이 이후에는 서구 문화를 비롯한 외부 문화가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문화갈등은 약화되는 경향이다.

이스라엘은 건국이후 지속되어 온 아랍주민들과의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1980년대 이후 러시아 및 에티오피아 출신의 대규모 이민이 유입되면서 갈등이 복잡화되고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홍콩은 중국에 귀속된 이후 중국이 홍콩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사회문화적 갈등은 상대적으로 약했고 현재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중국 본토의 민주화 요구 확대나 대만과의 통일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갈등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사회문화적 갈등에 비교적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체제에 위협을 줄 수준이 되지 않도록 갈등을 꾸준하게 관리·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갈등의 양상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미국은 스페인어 사용 주민의 증가 등 인구학적 구성이 변화하는 경우에 사회문화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남북한은 적대적 대결구도에서 화해협력의 단계로 전환되면서 사회문화교류가 증가되었다. 기본적으로 사회문화교류 자체는 상호이해 증진을 지향하고 사회문화적 갈등을 축소 혹은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남북한 문화의 이해가 증진되고 갈등이 약화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냉전문화의 유산과 교류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남북한간 사회문화적 접촉이 오히려 문화적 거리감을 확인하고 증폭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2. 통합을 지향하는 대응의 유형

1) 대응의 주체별 분류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해외 사례에서 통합을 지향한 대응의 주체는 크게 국가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영역은 다시 중앙정부가 주체가 된 경우와 지방정부가 주체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이를 대응 내용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표 IV-8> 대응의 주체와 사회문화갈등 및 통합

구분		국가
국가영역	중앙정부	캐나다 ↑, 이스라엘 ↑, 베트남, 중국(홍콩)
	지방정부	독일
시민사회 영역		독일, 캐나다 ↓, 미국, 이스라엘 ↓

대응의 주체는 근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숙정도와 정치권 분권화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강하고 시민사회가 활발한 독일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통합 과정에서 주체로 나서고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캐나다 및 미국의 경우도 비슷한데 다만 사회문화적 갈등이 중요한 국가과제였던 캐나다의 중앙정부가 상대적으로 통합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 시민사회적 통합의 주체가 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취약한 까닭에 국가영역에서는 중앙정부가 통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시민사회가 미약한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는 주로 국가영역에서 통합의 주체가 되고 있다.

2) 대응의 방법별 분류

사회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통합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응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IV-9> 대응의 방법과 사회문화갈등 및 통합

구분	국가
직접	독일, 캐나다, 미국, 베트남, 홍콩, 이스라엘
간접	독일, 캐나다, 미국, 이스라엘

직접적인 대응은 사회문화통합 정책을 구체적이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다문화화를 지향하면서 토대가 취약한 문화를 지원하거나,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 통합관련 기구를 설립하고 운용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른 것은 간접적인 대응이다. 갈등의 주체들이 상호이해를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다양성과 평화 그리고 갈등해소를 위한 가치를 갖도록 시민들을 양성하는 것 등이

간접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3. 해외통합 사례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개별 국가별 통합사례의 시사점

(1)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주민 간 내적통합의 지난한 과정이 보여주듯이 미시적 차원의 사회통합은 시스템의 통합보다 훨씬 더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통일독일의 상태에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는 동서독지역의 실업자 뿐 아니라, 통일에 무관심했던 서독의 납세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남북한 문화공동체를 목표로 할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 시급하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통일 당시 문화는 체제통합에 당위성과 필연성을 부여하는 요소였으나 통일이후 문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왜냐하면 문화가 실질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추진체로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은 경제적 문제로 치환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며, 양 쪽의 갈등은 세대를 너머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오직 문화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남북한의 관계에서 보자면, ‘변화를 통한 접근’이 요구된다. 사회통합은 갈등주체들의 상호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한 쪽의 일방적인 변화만 강요되어서는 진정한 통합이 일어날 수 없다. 독일의 경우, 서독인들은 전혀 변화할 필요가 없었고 동독인들은 의식, 가치관, 정체성과 같이 모든 것을 변화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상대적인 박탈감과 패배감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갈등담론의 부재로 인해서 갈등의 원인과 양상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사라지고 그 결과 오히려 갈등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동서독의 경우, 서독지역의 갈등의식부재는 동독지역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박탈감만큼이나 내적통합에 장애로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갈등의식의 부재로 인해서 동독주민이 알게 모르게 자신의 과거를 침묵해야 하고 심하면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통합이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거가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동서 생애교환 프로그램과 같이 갈등의 주체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흡수통일의 방식은 흡수되는 쪽의 상대적 박탈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정치와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적 통합이어야 한다. 갈등담론과 통합담론이 함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2) 캐나다·미국

시기별로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이 변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주된 강조사항은 ‘문화적 유산(cultural heritage)’이다. 앞서 밝혔듯이, 캐나다는 나와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문화적 원리에 입각한 다문화정책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는 캐나다의 시민의식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렇듯,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주의 정책의 본질은 개인이 가진 자기 정체성을 인정(recognition)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문화적 유산인 언어, 역사, 종교, 전통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제 이러한 문화적 유산은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모든 캐나다인의 문화유산으로 취급되어 학습되고 있으며, 미디어와 예술의 주요한 자원으로서 모든 캐나다인들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 즉 캐나다를 이루는 구성원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은 곧 캐나다의 문화유산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주자들의 다양한 문화를 매우 의미 있는 캐나다의 문화유산으로 취급한다. 바로 이러한 개방적인 자세가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핵심이자 특성이다.

모든 문화가 캐나다의 ‘문화적 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캐나다 사회가 기존에 도출한 이념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대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는 흔들릴 수 없다. 캐나다 사회에서는 이슬람의 문화유산인 부르카(burka)를 착용한 여성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여성이 이슬람 전통 문화를 보존할 목적으로 부르카를 착용할 경우, 이는 캐나다의 문화적 유산으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르카가 캐나다에 있는 이슬람 여성들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된다면, 이는 캐나다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타과의 대상이 된다. 즉,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라는 이념적 가치를 통하여, 모든 문화를 인정하지만, 특정 문화가 캐나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가치나 인간의 기본 권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의 특징이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가 의미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견고함에 있다. 현재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국내 경제의 불황 및 우경화로 인하여, 다문화주의에 대한 확신과 배려 정책이 약화되면서, 다문화주의가 퇴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캐나다 내부에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자체가 혼

들리거나 그 중요성이 의심을 받지 않으며, 여전히 사회 통합의 중요한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가 단지 이민정책 혹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은 이민정책을 넘어 사회통합의 전략일 뿐 아니라, 가치체제를 가진 일종의 이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다문화주의가 위기에 처한 현 시점에도 캐나다는 다문화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199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다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이주자들이 미국사회에 미국인으로서는 ‘미국화(Americanization)’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화’를 지향하는 다문화정책은 연방 정부·연방 기관보다는 주정부나 시 정부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이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주로 사적인 주체에 의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민간단체가 다문화정책을 주로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운 이주자들에 대한 성공적인 정착을 도와 그들을 미국인으로서는 ‘미국화(Americanization)’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사회갈등의 현황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캐나다와 미국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캐나다는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에 개입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중앙 정부가 전면에서 나서기보다는 지방정부나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그들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룩하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각각 고유한 특징이 있다. 이 두 미주 지역의 다문화정책의 사례를 통하여, 도출된 이상적인 다문화정책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다문화정책은 캐나다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동시에 민간단체와 같은 비공식적인 차원에서의 다문화정책을 지원·육성하여, 공적 영역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비공식적인 사적 영역에서 충분하게 보완해나가는 방식이다. 다문화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이다.

<표 IV-10> 미주 지역 다문화정책을 통해 본 한국의 다문화정책 제언 사항

국가별	분야별	제언 내용
캐나다	이념적	다문화주의를 국가적 이념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정책적	문화가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민자들의 소수 문화라도 한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한국의 문화유산으로서 인정하고 보전해야 한다.
	정책수행체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이 확실히 법제화되어 명시되어야 한다.
미국	이념적	다문화주의적 동화정책을 국가적 이민정책으로 확립해야 한다.
	문화정책적	타문화에 대하여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수행체계	지방분권화의 원리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최대한 존중한 다문화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민간의 활동을 극대화해야 한다.

개별국가별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는 다문화주의가 국가적 시민의식으로서 캐나다 사회 전 영역에 파급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공적 영역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사회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통합정책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주의를 국가적 이념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가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한다.

셋째, 이민자들의 소수 문화라도 한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한국의 문화유산으로서 인정하고 보전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확실히 법제화되어 명시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오히려 민간단체의 사적 영역에서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려는 다문화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미국의 사회통합정책은 1980년대까지 동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부터는 다문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캐나다와는 달리, 자연방임적인 자세로 이에 대처한다. 미국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며, 지방정부 혹은 민간의 사적 영역에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이들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준다. 이 뿐 아니라, 미국의 다문화정책이 캐나다와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이는 미국이 소수인종집단의 문화적 전통 유지나 보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로 이들을 '미국화(Americanization)'하여 미국주류사회에 편입시키려는 정책적 목표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경우, 발생할만한 잠재적인 사회 갈등의 가능성을 '미국화'라는 동질성을 확보하여 차단하려는 것과 동시에, 이들을 진정한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의도이다. 미국의 사회통합정책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적 동질성 확보를 국가적 이민정책으로 확립해야 한다.

둘째, 타문화에 대하여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방분권화의 원리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다문화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넷째,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민간의 활동을 극대화해야한다.

(3) 베트남

베트남의 통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흡수통합이라 할지라도 특정 지역에 의한 독점적인 점령은 사회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포용가능한 각 세력을 배제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잠재적인 저항세력을 격리, 방출, 배제하는 정책은 체제 자체의 정통성을 침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포용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사회경제구조의 개편은 기존의 공동체를 해체하지 않는 조건에서 출발하여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변화추구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는 남부의 북화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개혁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북부의 남화(南化)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한 쪽의 체제를 일방적으로 다른 쪽에 부과한 결과라고 하겠다. 수렴론적 사고가 필요하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RV)은 공식적으로 종족문제에 기인한 심각한 갈등이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오늘날 베트남이 하나의 국가로서 성공한 것은 오랜 역사 동안 다문화 공존과 다종족성을 유지해온 점 덕분이라는 주장은 베트남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 사회주의국가는 소수종족을 국민통합과 현대화를 위한 정

책의 주요 타깃으로 삼고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공통적인 요소로 만들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4) 홍콩

홍콩의 경우에는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제한되어 있다. 영국의 식민지를 지내면서 자체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1997년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이후에도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홍콩의 시민사회 형성 사례는 남북한의 통합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정치제도나 경제제도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갈 수 있지만 문화는 소통과정 없이 통합에 이를 수 없는 속성이 있다. 시민사회는 사회계약론적인 개념으로 민주주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국민 주권의 보장, 권리와 자유의 보장, 경제적 안녕을 기본 전제로 민주적 요소에 대한 가치 소양을 조기에 함양하여 통일 후유증을 조기에 극복하고 한민족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자유시민 의식에 기초한 시민의식의 함양과 보급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내면화된 집단주의적 생활방식을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교양을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로 전환함으로써 통일이후에 발생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한국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우선적 과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의 상이한 생활방식은 통일이후 시민사회 형성과정에서도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통일 이후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을 저해하고, 사회 발전의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 이후 체계적인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회통합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라는 정체성을 가짐과 동시에 구성원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상을 어떻게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국가주의/민족주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문화의 지배성이 보장되는 한에서만 소수자의 집단적 ‘문화적’ 권리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 통합정책은 유대계 사람들만 향해 있으며, 비유대인(아랍, 이주노동자 등등)에게는 매우 배타적이다. 이러한 유대계 우대/비유대인 배척 정책은 그 목적이 유대인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에 있다는 점에

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특수성과 지정학적 위치에서 비롯된 바 크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차별적 통합정책은 한국사회가 배우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정책이다.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해외 통합사례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택한 국가들은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분단(독일, 베트남, 홍콩), 국가건설과정에서 원주민과의 갈등(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갈등(캐나다, 미국, 이스라엘의 러시아 및 에티오피아 이민)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으로 분열되었으며 문화적 갈등이 적지 않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의 존재와 통합의 지향이라는 차원에서는 해당 국가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차별성도 적지 않다.

첫째, 일단 갈등의 원인이 다양하였고 이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나 사회적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사회문화적 갈등의 원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을 요구한다. 원인의 다양성과 더불어 주목하여야 할 것은 실제 갈등 상황에서 원인들의 복합성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이념적 차원에서 비롯된 갈등이 취업 등 경제사회적 차이라는 계급적 원인과 결합되면서 증폭되었다. 인종 및 민족적 차이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 출신 이민들과 산업화 수준에서 차이가 큰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민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갈등이 복잡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갈등 국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 못지않게 다양한 원인들이 어떻게 융합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역사적 배경이 갈등의 존재와 통합을 위한 대응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열이전에 단일국가와 단일문화의 전통의 유무나 시민사회의 경험 여부는 사회문화적 갈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또한 식민지 경험이나 전쟁과 같은 물리적 충돌의 기억도 해당 국가별 차이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분권화의 수준 차이도 국가별 차별성과 관련이 있다. 시민사회의 경험이 있고, 분권화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독일에서 통합의 주체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라는 사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셋째, 역사적 배경 뿐 아니라 통일이냐 통합 이후의 체제의 성격도 사례별 차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주의 중심으로 통합을 이룬 홍콩이나 베트남은 이전 시기에 다문화적인 토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의 주체는 국가 특히 중앙정부 중심이 되고 있다. 반면 독일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통합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갈등이 전개나 통합에 대한 노력이 시민사회 영역이 중심이 되고, 국가

부분에서도 지방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이후 체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사회문화공동체의 성격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넷째, 내적 요인 못지않게 외적 환경도 통합을 지향하면서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스라엘은 건국이후 주변 국가들과 분쟁을 지속하였고, 강력한 내적 통합을 요구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아랍인들에 대한 통합정책과 이주 유대인에 대한 대응이 다르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도 대만과의 통일이 절대 명제였고 그 필요성은 여전하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이 홍콩에 대한 통합 정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대내외적 환경 요인들의 변화는 통합을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의 대응 변화를 유인하였다는 점이다. 독일은 통일 직후보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통일이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통합에 대한 대응이 다양해졌다. 베트남은 개방과 개혁이후 자본주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국가적 대응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에서 최소한 표면적이라고 할지라도 다문화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도 러시아와 에티오피아 이민의 대거 입국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의 사례로 검토한 국가들이 경험한 사회문화적 갈등이 원인부터 전개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적 사회적 노력들이 다른 것처럼 이들의 사례가 남북한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진행형인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구상 과정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갈등이 복합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분단으로 비롯되었지만 현재의 남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격차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문화적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의 개별 국가들의 사회문화적 갈등의 발생과 전개를 고려하여 향후 갈등의 변화 방향을 일정 부분 전망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별로 사회문화적 갈등이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갈등의 해소와 통합과정에서 통합이후의 체제 성격과 문화적 지향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통합이후 추구하여야 할 가치와 문화적 지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념적인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 다문화화를 지향할 것인가 민족문화는 어느 수준에서 추구하여야 할 것인가 등 사회문화적 통합의 원칙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상황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비교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제도적 통합이 아닌 사회문화적 통합이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셋째, 통합을 지향하는 대응이 다차원적이라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사회문화적 통합은 국가만의 몫이 아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동시에 참여하여야 할 일이고 정책이나 운동이나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례 국가들을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사실이다. 남북한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각각이 할 수 있는 일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향후 과제

본 연구가 2011년의 문화갈등과 통합의 유형화를 위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사례에 대한 심화된 조사 분석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포괄적인 차원에서 갈등의 현상과 대응을 정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개발이나 이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추가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사례 국가의 확대이다. 분열과 통합을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연구를 수행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참고하여야 할 사례들이 적지 않다. 사회적 갈등의 정도가 극심하였고 이를 극복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 지배와 신구교 갈등이 극심하였던 아일랜드나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남아프리카는 사례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나 남아프리카 모두 인명이 살상되는 극단적 갈등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전쟁의 경험과 적개심으로 점철되어온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갈등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통합의 유형으로서는 근대 국가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실험을 수행중인 유럽연합, 특히 사회주의에서 체제 전환을 경험하였던 동유럽 국가들의 문화적 전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연구는 개별 국가들의 사례를 포괄적으로 갈등의 원인, 전개 그리고 대응이라는 수준에서 병렬적으로 비교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험을 사회문화적 갈등의 세부적 단계에 따라 그리고 통합의 진전 단계에 따라 재분석 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축이 아니라 갈등과 통합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남북한의 상황전개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응의 주체도 대분류가 아니라 보다 세밀화 된 분류에 따라 다시 분석될 필요가 있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아니라 어떤 부서였는가 부서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지방정부인가 아니면 공적 기관인가 시민사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어떤 성격의 시민단체가 주도하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 사례에서 추진한 국가와 사회적 대응을 정책이나 프로그램 단위에

서 효과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상황 혹은 조건에서 수립된 정책과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었는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여기에 동원되는 국가기구나 시민사회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했는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추구하였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통합의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도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부록

1. 문화갈등 대응의 주체
2. 문화갈등 대응의 방법

1. 문화갈등 대응의 주체

〈표 부록-1〉 문화갈등 대응의 주체

지역	국가 영역		시민사회 영역
	중앙정부	지방정부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동독지역의 문화기반 복구를 위해 1991년부터 1993년 동안 <구동독지역문화재보호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총 28억 마르크 특별예산을 투입해서 약 230개소의 문화재 및 문화시설들을 긴급지원 · 이후 2004년까지 연방정부는 <문화등대 Kulturelle Leuchttürme> 사업을 벌려 구동독지역의 국보급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에 재정적인 협조 ·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독일의 세계문화유산 33개중 25개가 통일이후 등재되었으며 그중 11개가 구동독지역에 위치 · 독일은 한국의 경우와 다르게 학문을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문화를 함께 관장하는 행정시스템을 갖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주권의 원칙에 따라 문화정책의 책임과 권한이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구동독지역 주정부들은 다양한 방식의 지역주민 참여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유지 · 주정부는 자치단체 및 군과 같은 지방행정단위들과 함께 사회문화적 프로그램과 문화교육적 프로그램을 발전 · 그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특정지역범위를 넘어서서 활동하는 시설들을 지원 · 브란덴부르크주의 학술·연구·문화부는 주의회의 결의안에 따라서 2010년에 주정부차원에서 <모두를 위한 음악 Musische Bildung für alle>을 실행 · 이 사업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청소년들과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적 재능을 계발하며 음악학교들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 · 사업의 재원은 주정부에서 마련하며, 재원의 규모는 매년 약 백삼십만 유로 ·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학술·연구·문화부가 학문, 연구, 및 문화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포럼은 동서독 사회통합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례로서 향후 남북한의 문화공동체 성립에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음 · 동서포럼은 동서독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개인적인 이야기, 그들이 살았던 생활세계 이야기 등을 통해서 호기심을 깨우고 지식을 매개하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도움 · 매월 대중강연과 토론회, 동서독 대화의 장, 독일-터키 대화의 장, 괴테리츠 씨클, 독일-폴란드 콜로키엄, 차세대 지도자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 동서독 대화의 장은 매월 열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과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으로서 십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월례행사

		<p>게 관장하며, 학문과 문화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행정부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란덴부르크주의 사회문화관련 시설들 및 문화교육학적 시설들은 대부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단체들에 의해 운영 · 학술·연구·문화부는 학술 연구부문과 문화부문으로 구성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며, 연방정부는 다문화주의를 직접 관리 · 캐나다 중앙정부는 다문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며, 캐나다의 포괄적인 이미지를 제시 · 연방정부 자체가 캐나다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질적인 수행주체이자, 주요 관리 책임자를 의미 · 캐나다 다문화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분담은 비교적 확실하게 구분 · 캐나다 헌법 제 95조에는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이 명시 · 캐나다의 연방정부는 다문화주의의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자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몇 중요한 사안 혹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 · 캐나다의 신규이민자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는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과 목표를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그에 대한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문화정책 혹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 온타리오 주정부는 특별 이민의 선정 업무를 제한적으로 담당하며,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협약에 의해 온타리오 주에 이민 비율 혹은 혜택을 주는 연방정책을 반영하여 주정부 차원의 이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 · 밴쿠버 시정부는 중앙 연방 및 주정부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다문화 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에이전시들 간의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지원 · 밴쿠버 시정부는 캐나다인이지만 한 편으로는 훌륭한 밴쿠버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이민자들에게 밴쿠버의 역사와 캐나다 원주민의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문화 서비스를 통하여 문화를 통한 캐나다 사 	

	<p>에 대한 정책은 기존에는 문화유산부에서 담당해왔지만, 2008년 이민부로 다문화 업무가 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주된 이유는 새로운 이민자들의 수가 급증하여, 이들에게 이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정착 사업을 제공하기 위함 · 캐나다 정부는 2013년부터 5년 이내의 새로운 이민자들의 국내 정착 사업을 직접 통제하여, 다문화정책에 대한 국가적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결정 (단, 퀘벡 주는 이민부의 신규 이민자 정착 사업의 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이민부의 신규이민자 관리 사업의 목표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특정 주 혹은 지역민이기에 앞서, 캐나다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여 캐나다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 · 새롭게 신규이민자 정착 사업 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민부는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캐나다 사회로의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p>회로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p>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다문화정책의 주요한 특징은 중앙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 ·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을 총괄하거나 관장하는 체계화된 조직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 · 미국의 다문화정책에는 국가적인 단위의 공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차원 및 시정부 역시 다문화주의를 유지하거나 소수인종커뮤니티와 정책집행을 조율하는 위원회(advisory board) 등을 설치, 운영하지 않음 ·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주로 주와 시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주로 주와 시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영역에서 추진 · 1995년 설립된 민간단체인 ACDN(American Conference on Diversity of NYC)은 민간 레벨에서 후원자와 결합된 NGO로 인증 간 적대감

<p>기관의 역할이 미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관련 정부정책에 관한 헌법이나 법률로서 규정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미국은 이민자정책 정책에 있어서도 이민자나 소수인종커뮤니티와 거리를 두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자유방임' ·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지금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전 세계 난민들의 정착을 미국정부가 다양한 비정부조직(상호지원단체; Mutual Assistance Associations)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정지원 · 이것은 다문화사회를 향한 미국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실례 ·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중앙 정부적인 성격의 기관으로는 미 연방 법무부 내 CRS(Community Relations Service) · CRS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커뮤니티 간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 · 1964년 민권법에 의해 설치된 CRS가 주정부/지방정부는 물론 공/사조직 및 공동체집단들로 하여금 인종/민족간 갈등, 분쟁, 시민집단간 무질서를 방지, 해결하고 인종 간 안정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일한" 연방기구 · CRS는 직접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다양한 문화공동체 간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p>역에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시 문화국, 새크라멘토 정신건강국과 NC CU(North Carolina Central University)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적 사회 통합의 사례를 제공 · 뉴욕 시는 중앙정부와 주정부보다는 시 자체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을 시행하는 편인데, 특정 문화 조직이나 뉴욕 시의 공공 문화기관으로서의 박물관, 미술관, 오페스트라 활동 등을 지원하면서 뉴욕 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 · 새크라멘토 정신건강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문화적 혹은 언어적으로 독특한 계층에게 맞춤형 공공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 · 연방 교육부가 다문화교육에 대한 국가적 정책을 확인하고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학교커리큘럼에 다문화주의를 채택하는 정책은 주정부의 다문화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결정에 의존 · 인종다양성이 높거나 이민자 비율이 높아 사회갈등이 우려되는 주의 대부분에서는 다문화원칙이 학교커리큘럼 내에 반영 · 상대적으로 인종다양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다문화 교육정책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 · NCCU는 언어를 통한 사회 통합에 주력하며 이 지역 모든 이주자들에게 언어 훈련을 제공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 해소하기 위한 캠프,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 · ACDN은 정부가 할 수 없는 문화다양성 교육과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을 민간차원에서 전개하며, 그 과정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 · 애틀란타 한인회는 미 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한인 뿐 아니라, 아시아인들 혹은 그 지역 소수민족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거나 자원봉사를 통하여, 한인 및 여러 소수 민족 이주자들의 미국 사회 적응과 사회 통합을 지원 · 애틀란타 한인회는 미국 경찰, 사법, 언론의 불공정한 결정에 의해 L.A. 흑인폭동이 발생하여, 한인과 흑인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자체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도 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초기에는 주로 흑백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오늘날에는 백인집단과 아랍계, 이슬람계 집단 간의 관계 조정에 더 많은 역할이 요구 · 연방 교육부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하나의 책임으로 규정하며, 교육정책에 관한 전국적인 표준을 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재정보조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 국립예술기금(NEA)은 중앙 연방정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전체의 예술발전과 미국 소수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과 그들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중심 기구 · 국립예술기금은 차별과 갈등 해소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예술적 창조성 강화와 예술의 공공성 확대를 목표 · 국립인문기금(NEH)은 인문학을 바탕으로 좀 더 풍성하고 심도 있는 창조적 미국을 만드는데 주력 · 국립인문기금은 NEA와 마찬가지로, 인문학의 발전을 통하여, 미국의 다양한 문화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의 극대화가 그 목표 	<p>국 사회 적응과 이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여, 미국의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p>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적 통합과정 또한 북부의 사회주의체제를 일방적으로 남부에 부과하는 형태로 진행 · 특히 그 모습은 정치-경제부문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함께 남베트남 	.	.

	<p>지배계급의 철폐, 사회 계층구조의 전환, 사회 생활상의 통제 강화 등으로 나타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직후 이를 성취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주요 수단으로는 재교육, 장기간 개조학습, 신경 제지구를 포함한 강제 이주, 비밀 출국과 반공 식적인 망명을 비롯한 방출 등 · 이에 대한 남부 주민들의 대응행위는 복종(loyalty), 탈출(exit), 저항(voice)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남 · 통일 이후 반정부적 인사들 대부분은 개조학습을 받은 후 포용되거나 국내 신경제지구 또는 해외로 방출. 다양한 방식으로 잠재적 위험 세력을 제거한 것 · 종교의 통합과 통제 · 전통의례와 관련, 통일 직후 남부에서 대규모 혼례와 장례행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하였으나 주민들을 벌금을 물고서도 의례를 지속 · 전후 새 정권은 사영시장과 상품에 대한 공격과 함께, '구제도의 음악'연주를 금지 · 지의 대상에는 비사회주의권 외국 음악뿐만 아니라 1954-75년 기간에 남부베트남에서 작곡된 음악도 포함 · 구 남부사회의 '문화적 잔재(di tích van hoa)'를 제거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통해 테이프, 음반, 악보 등을 체계적으로 몰수하여 파괴 · 이러한 음악을 어떤 식으로든 연주하는 것도 금 		
--	------------------------------------------------------------------------------------------------------------------------------------------------------------------------------------------------------------------------------------------------------------------------------------------------------------------------------------------------------------------------------------------------------------------------------------------------------------------------------------------------------------------------------------------------------------------------------------------------------------------------------------------------------------------------------------------------------------------------------------------------------------------	--	--

	<p>지하였고 발각되면 처벌하거나 벌금을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비전, 라디오의 방송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음악의 연주나 청취도 금지하였고 대중공연의 레퍼토리도 통제 · 비판은 특히 대중음악에 집중적으로 적용. 특히 미국 신식민주의가 '반동적 음악'을 널리 유포하였다는 점이 부각 · 사회주의 지식인들은 신식민주의가 장기지속적인 노예화의 틀을 실현하기 위해 남베트남에 음란하고 타락한 예술과 문학뿐만 아니라 반동적(phan dong) 철학과 이론을 잠입(du nhap)시켰다고 판단 · 특히 음악은 '노예화 문화체계'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간주 · 이러한 정책은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까지 지속 · 1998년 7월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5차 대회에서는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진보적인 베트남 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통과 · 중심이 되는 모티브는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이지만, 이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이미 1940년대에 제시된 '민족화' 원칙에 깊게 새겨져 있는 것 · '원래 자신의 것'이 곧 '최고의' 민족 문화라는 의미를 다시 내포함으로써 '이방의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원래 자신의 것'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	-----------------------------------------------------------------------------------------------------------------------------------------------------------------------------------------------------------------------------------------------------------------------------------------------------------------------------------------------------------------------------------------------------------------------------------------------------------------------------------------------------------------------------------------------------------------------------------------------------------------------------------------------------------------------------------------------------------------------------------------------	--	--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콩에서는 홍콩의 역사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음1. 관습의 지속2. 영어교육이 지속3. 중국 본토(메인랜드)와의 홍콩 국경선의 유지4. 홍콩의 국제적 지위5. 홍콩의 대외관계6. 외국에서의 대우7. 홍콩은 계속해서 중국 대륙보다 더 많은 정치적인 자유(언론의 자유 포함)를 가짐8. 홍콩에서 자동차들은 중국과는 달리 왼쪽으로 계속해서 달림9. 영국식 전원 플러그, TV 송출방식(PAL-1) 및 다른 많은 기술적 기준들은 여전히 홍콩에서도 사용10. 홍콩은 개별적으로 국제 전화 번호(+852)를 유지11. 영국 군무, 행진, 영어로 된 군사 명령어들은 모든 민간조직을 포함한 훈련(disciplinary service)에서 여전히 이용12. 홍콩은 여전히 영국식 날짜 형태를 씀13. 퀸 빅토리아와 킹 조지와 같은 영국 왕실의 모든 동상들은 여전히 남아있음14. Queen's Road, King's Road와 같은 도로명들도 여전히 남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콩의 경우에는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제한· 영국의 식민지를 지내면서 자체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1997년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이후에도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대인-아랍 갈등은 분리를 인정하는 현상유지 정책· 보수 정권의 등장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 경우 (특히 텔아비브) 인도적 지원 정책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대인-아랍 갈등 대응은 평화와 문화 간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

	<p>아랍계에 대한 차별 강화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대인 내부 갈등 대응은 유대인 내부의 다양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변화 · 용광로 -> 모자이크(적극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 모자이크. 즉 '아래로부터의 다양성' 승인) · 뉴커머들에 대한 적극적 수용(종교적·인구적 이유) + 체계적/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류화가 목표로서 매우 적극적인 노력 · 유대인-비유대인 이주민 갈등 대응에는 일목요연한 이주노동자 통합 정책은 없으며, 관련 법률도 미비. 기본적으로 배타적. '회전문 정책.' '추방'의 연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정책 제안 프로그램 · 국내적(보수파 지배) + 국제적(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문제로 궁극적 해결 난망 · 유대인 내부 갈등 대응은 유대인 에이전시 등을 통한 적극적 협력. · '유대인 국가'의 정체성 아래, 유대인 내부의 갈등은 주류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 노력 · 유대인-비유대인 이주민 갈등 대응은 다양한 인도적 지원 활동 · 인권 운동.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 차원.
--	-------------------------------------------------------------------------------------------------------------------------------------------------------------------------------------------------------------------------------------------------------------------------------------------------------------------------------------------------------------------	--	-----------------------------------------------------------------------------------------------------------------------------------------------------------------------------------------------------------------------------------------------------------------------------------------------------------------------------

2. 문화갈등 대응의 방법

<표 부록-2> 문화갈등 대응의 방법

지역	직접	간접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는 자치단체 및 군과 같은 지방행정단위들과 함께 사회문화적 프로그램과 문화교육학적 프로그램을 발전 · 그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써 특정지역범위를 넘어서서 활동하는 시설들을 지원 · 브란덴부르크주의 학술·연구·문화부는 주의회의 결의안에 따라서 2010년에 주정부차원에서 <모두를 위한 음악 Musische Bildung für alle>을 실행 · 이 사업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청소년들과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적 재능을 계발하며 음악학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 · 사업의 재원은 주정부에서 마련하며, 재원의 규모는 매년 약 백삼십만 유로 · 구동독지역의 문화기반 복구를 위해 1991년부터 1993년 동안 <구동독지역문화재보호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총 28억 마르크 특별예산을 투입해서 약 230개소의 문화재 및 문화시설들을 긴급지원 · 이후 2004년까지 연방정부는 <문화 등대 Kulturelle Leuchttürme> 사업을 벌여 구동독지역의 국보급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에 재정적인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란덴부르크주의 사회문화관련 시설들 및 문화교육학적 시설들은 대부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단체들에 의해 운영 · 동-서-포럼은 동서독 사회통합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례로서 향후 남북한의 문화공동체 성립에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음 · 동서포럼은 동서독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개인적인 이야기, 그들이 살았던 생활세계 이야기 등을 통해서 호기심을 깨우고 지식을 매개하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도움 · 매월 대중강연과 토론회, 동서독 대화의 장, 독일-터키 대화의 장, 괴테리츠 씨클, 독일-폴란드 콜로키엄, 차세대지도자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 동서독 대화의 장은 매월 열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과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으로서 십년이 상 지속되고 있는 월례행사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타리오 주정부는 특별 이민의 선정 업무를 제한적으로 담당하며,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협약에 의해 온타리오 주에 이민 비율 혹은 혜택을 주는 연방정책을 반영하여 주정부 차원의 이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밴쿠버 시정부는 중앙 연방 및 주정부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다문화 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에이전시들 간의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지원 · 시정부는 캐나다 인이지만 한 편으로는 훌륭한 밴쿠버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이민자들에게 밴쿠버의 역사와 캐나다 원주민의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문화 서비스를 통하여 문화를 통한 캐나다

		다 사회로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중앙 정부적인 성격의 기관으로는 미 연방 법무부 내 CRS(Community Relations Service) · CRS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커뮤니티 간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 · 1964년 민권법에 의해 설치된 CRS가 주정부/지방정부는 물론 공/사조직 및 공동체집단들로 하여금 인종/민족 간 갈등, 분쟁, 시민집단 간 무질서를 방지, 해결하고 인종 간 안정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일한" 연방기구 · CRS는 직접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다양한 문화공동체 간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 설립 초기에는 주로 흑백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점차적으로 최근에는 백인집단과 아랍계, 이슬람계 집단 간의 관계 조정에 더 많은 역할이 요구 · 연방 교육부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하나의 책임으로 규정하며, 교육정책에 관한 전국적인 표준을 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재정보조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 뉴욕시 문화국, 새크라멘토 정신건강국과 NCCU(North Carolina Central University)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적 사회 통합의 사례를 제공 · 1995년 설립된 민간단체인 ACD(American Conference on Diversity)는 민간 레벨에서 후원자와 결합된 NGO로 인종 간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캠프,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이민자정책 정책에 있어서도 이민자나 소수인종커뮤니티와 거리를 두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자유방임' ·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지금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전 세계 난민들의 정착을 미국정부가 다양한 비정부조직(상호지원단체; Mutual Assistance Associations)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정지원 · 이것은 다문화사회를 향한 미국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실례 · 국립예술기금(NEA)은 중앙 연방정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전체의 예술발전과 미국 소수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과 그들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중심 기구 · 국립예술기금은 차별과 갈등 해소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예술적 창조성 강화와 예술의 공공성 확대를 목표 · 국립인문기금(NEH)은 인문학을 바탕으로 좀 더 풍성하고 심도 있는 창조적 미국을 만드는데 주력 · 국립인문기금은 NEA와 마찬가지로, 인문학의 발전을 통하여, 미국의 다양한 문화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의 극대화가 그 목표 · 학교커리큘럼에 다문화주의를 채택하는 정책은 주정부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존 · 인종다양성이 높거나 이민자 비율이 높아 사회 갈등이 우려되는 주의 대부분에서는 다문화원칙이 학교커리큘럼 내에 반영 · 상대적으로 인종다양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다문화 교육정책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 · 뉴욕 시는 중앙정부와 주정부보다는 시 자체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을 시행하는 편인데, 특정 문화 조직이나 뉴욕 시의 공공 문화 기관으로서의 박물관, 미술관, 오케스트라 활동 등을 지원하면서 뉴욕 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 · 새크라멘토 정신건강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문화적 혹은 언어적으로 독

		<p>특한 계층에게 맞춤형 공공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CU는 언어를 통한 사회 통합에 주력하며 이 지역 모든 이주자들에게 언어 훈련을 제공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미국 사회 적응과 이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여, 미국의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 · 애틀란타 한인회는 미 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한인 뿐 아니라, 아시아인들 혹은 그 지역 소수민족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거나 자원 봉사를 통하여, 한인 및 여러 소수 민족 이주자들의 미국 사회 적응과 사회 통합을 지원 · 애틀란타 한인회는 미국 경찰, 사법, 언론의 불공정한 결정에 의해 흑인과 한인 사이의 폭동이 발생하였을 때, 자체적인 조직을 활용하여, 갈등을 조정하기도 함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적 통합과정 또한 북부의 사회주의체제를 일방적으로 남부에 부과하는 형태로 진행 · 특히 그 모습은 정치-경제부문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함께 남베트남 지배계급의 철폐, 사회계층구조의 전환, 사회생활상의 통제 강화 등으로 나타남 · 통일 직후 이를 성취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주요 수단으로는 재교육, 장기간 개조학습, 신경제지구를 포함한 강제이주, 비밀 출국과 반공식적인 망명을 비롯한 방출 등 · 이에 대한 남부 주민들의 대응행위는 복종(loyalty), 탈출(exit), 저항(voice)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남 · 통일 이후 반정부적 인사들 대부분은 개조학습을 받은 후 포용되거나 국내 신경제지구 또는 해외로 방출. 다양한 방식으로 잠재적 위험세력을 제거한 것 · 종교의 통합과 통제 · 전통의례와 관련, 통일 직후 남부에서 대규모 혼례와 장례행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하였으나 주민들을 벌금을 물고서도 의례를 지속 · 전후 새 정권은 사영시장과 상품에 대한 공격과 함께, '구제도의 음악'연 	

	<p>주를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의 대상에는 비사회주의권 외국 음악뿐만 아니라 1954-75년 기간에 남부베트남에서 작곡된 음악도 포함 · 구 남부사회의 '문화적 잔재(di tich van hoa)'를 제거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통해 테이프, 음반, 악보 등을 체계적으로 몰수하여 파괴 · 이러한 음악을 어떤 식으로든 연주하는 것도 금지하였고 발각되면 처벌하거나 벌금을 부과 · 텔레비전, 라디오의 방송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음악의 연주나 청취도 금지하였고 대중공연의 레퍼토리도 통제 · 비판은 특히 대중음악에 집중적으로 적용. 특히 미국 신식민주의가 '반동적 음악'을 널리 유포하였다는 점이 부각 · 사회주의 지식인들은 신식민주의가 장기지속적인 노예화의 틀을 실현하기 위해 남베트남에 음란하고 타락한 예술과 문학뿐만 아니라 반동적(phan dong) 철학과 이론을 잠입(du nhap)시켰다고 판단 · 특히 음악은 '노예화 문화체계'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간주 · 이러한 정책은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까지 지속 · 1998년 7월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5차 대회에서는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진보적인 베트남 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통과 · 중심이 되는 모티브는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이지만, 이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이미 1940년대에 제시된 '민족화' 원칙에 깊게 새겨져 있는 것 · '원래 자신의 것'이 곧 '최고의' 민족 문화라는 의미를 다시 내포함으로써 '이방의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원래 자신의 것'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홍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습의 지속 2. 영어교육이 지속 3. 중국 본토(메인랜드)와의 홍콩 국경선의 유지 	

	<p>4. 홍콩의 국제적 지위</p> <p>5. 홍콩의 대외관계</p> <p>6. 외국에서의 대우</p> <p>7. 홍콩은 계속해서 중국 대륙보다 더 많은 정치적인 자유(언론의 자유 포함)를 가짐</p> <p>8. 홍콩에서 자동차들은 중국과는 달리 왼쪽으로 계속해서 달림</p> <p>9. 영국식 전원 플러그, TV 송출방식(PAL-1) 및 다른 많은 기술적 기준들은 여전히 홍콩에서도 사용</p> <p>10. 홍콩은 개별적으로 국제 전화 번호(+852)를 유지</p> <p>11. 영국 군무, 행진, 영어로 된 군사 명령어들은 모든 민간조직을 포함한 훈련(disciplinary service)에서 여전히 이용</p> <p>12. 홍콩은 여전히 영국식 날짜 형태를 씀</p> <p>13. 퀸 빅토리아와 킹 조지와 같은 영국 왕실의 모든 동상들은 여전히 남아있음</p> <p>14. Queen's Road, King's Road와 같은 도로명들도 여전히 남아 있음</p>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커머들에 대한 적극적 수용(종교적/인구적 이유) + 체계적/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류화가 목표로서 매우 적극적인 노력 · 유대인-아랍 갈등 대응은 평화와 문화간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 · 협력적 정책 제안 프로그램 · 유대인 내부 갈등 대응은 유대인 에이전시 등을 통한 적극적 협력. · '유대인 국가'의 정체성 아래, 유대인 내부의 갈등은 주류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경우 (특히 텔아비브) 인도적 지원 정책은 있음 · 유대인-비유대인 이주민 갈등 대응은 다양한 인도적 지원 활동 · 인권 운동.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 차원.